



윤석열의
노동 개악
7면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8~9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3면

늘어나는 미분양과
건설·금융 위기 10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11면

이란 정부는 왜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가?
13면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퇴진 운동

2, 4, 5, 6, 15, 16면



2022년은 다중 위기의 해였다

관련 기사 3면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 등을 들었다. 우파가 만든 가짜뉴스 사례도 언급했지만 구색 맞추기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비난과 규제 촉구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은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직접 공격했다.

얼마 전 학술원 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다.

한동훈은 ‘청담동 술 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를 압수수색하고, 〈더탐사〉와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위주의적 행태

그러나 가짜뉴스는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정부나 우파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 용어를 오·남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보통 허위 정보를 뉴스의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다양한 의견 표명과는 다르다.

설령 어떤 의혹이 설득력이 떨어진 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다.

MBC의 비속어 보도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짜뉴스로 공격한 것은 윤석열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 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압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쓰라고 한 것을 비판한 보도들에 대해 얼마 전 대통령실이 “단순 행정적 용어 통일”에 불과한 것이라 반박하며 “가짜뉴스”, 법적 대응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청담동 술 자리’ 의혹이나 ‘천공 개입’ 의혹도 사안의 중요성과 보도의 설득력 여부와는 별개로 단지 의혹 제기만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위선적인 가짜뉴스 비난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저항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비난은 위선적이다.

그들이야말로 밥 먹듯이 사실을 맥락에서 떼어 내거나 비틀고 침소봉대해서 진실을 왜곡해 오지 않았던가?

메스꺼운 위선

가장 최근 〈조선일보〉의 행태만 봐도 그렇다. 〈조선일보〉는 고물가·고유가의 절박한 고통에 맞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물류 인질 잡고 정치투쟁”이라고 비난하고(11월 23일자), 화물연대 한 조합원이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쏜 것을 두고 “테러”라고 침소봉대하며(11월 28일자), 앞장서서 파업을 비난했다.

또, 한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2차 가해 범죄”라고 게거품을 물었다(11월 17일자 사설).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기상천외 억지 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12월 15일자 김창균 칼럼).

〈조선일보〉가 가진 영향력은 여느 가짜뉴스 생산자보다 막강하다. 따라서 그 해악도 더 크다.

사실, 부가 한줌의 소수에 집중돼 있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충돌

하는 이 체제하에서, 소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기존 질서와 기구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조선일보〉가 애초 온전한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다.

물론 오늘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기성 체제와 기존 질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가짜뉴스가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 내 이전투구가 심해질수록, 권력자들은 상대를 공격하고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부추기며 유용한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반동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증거 찾기에 확증편향적으로 몰두하기 십상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투쟁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진짜 타깃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비난하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비난하면서 정부를 향한 의혹 제기를 막고,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럼으로써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가 ‘청담동 술 자리’ 의혹이나 ‘천공 개입’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공격한 것도,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이런 주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등 우파는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도 본디 의미인 ‘다수의 지배’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민주주의를 “타협과 공존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기업인들과 부유층을 위한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타협하고 조율하라는 뜻이다. 두 정당이 하루빨리 부자 감세 예산안과 산적한 노동·연금·교육 개악 법안들을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우파 정부와 언론의 위선적인 가짜뉴스 비난(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처벌 촉구)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성지현

가짜뉴스에 대한 더 일반적인 글은 본지 337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를 보시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오즈의 마법사》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2022년을 겪은 우리도 똑같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결국에는 2007~2009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은 체제의 정상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게 가능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세계가 자유주의 경제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유례 없는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생물학적 위기, 경제 위기, 지정학적 위기 등 복수의 위기가 중첩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다차원적 위기다. 어떤 면에서 이 위기는 에릭 홉스봄이 “재앙의 시대”로 일컬은 1914~1945년과 비슷하다. 그 시기가 시작될 때에는 제1차세계대전이 개전했고 그 뒤에는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해 1918~1919년 사이에 5000만~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번에는 순서가 달랐다. 코로나 팬데믹이 먼저 온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망자 수가 100년 전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자본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징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커져가는 미·중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볼 때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세계화를 유지하는 데서 핵심적이었던 관계들에서 서방 자본주의를 떼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나라들이 중국을 제조업 제품 공급처이자 자국 제품의 수출 시장으로 삼고 러시아를 값싼 에너지 공급처로 삼으면서 형성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한다. 이는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전이 보여 주듯이 말이다. 서방 언론들이 설 새 없이 추켜세우는 우크라이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체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징후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인류는 생물학적 위기, 경제 위기, 지정학적 위기 등 다수의 위기가 중첩돼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다차원적 위기다.

의 군사적 성과들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핵무기가 동원되는 확전의 악순환이 벌어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핵전쟁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핵탄두를 400개에서 1500개로 늘리려 한다.

물론 이는 미국의 5428개나 러시아의 5977개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핵탄두만으로도 인류의 대부분을 말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군비 경쟁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있는 소수의 지배계급 정책 결정자들과 장성들의 합리성과 자기 절제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로 불확실한 변수가 또 있다.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다. 이는 홉스봄이 말한 “재앙의 시대”와 지금이 다른 점이기도 하다.

위험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하에서 산업화된 농업이 자연에 침투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과정 때문에 위험한 바이러스가 종을 넘나들다 인간으로 전염되기 쉬워진 것이다.

한편, 이런 과정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급감하는 현상에서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사례를 하나 들면, 식

량 가격 상승은 투즈가 말한 “다중 위기”의 좋은 사례다. 이는 팬데믹 동안의 공급 사슬 교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과 식량 생산비 상승, 심각한 가뭄이 결합된 결과다.

위기의 다양한 차원들이 상호작용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 재앙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과 혁명뿐이다.

몇 주 전 언론들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통치자로 무시무시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칭송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선 시위가 일어났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가장 많은 이목을 끈 비교적 작은 시위와 추모식에 가려서 잘 조명되지 않았지만 … 중국 전역의 수많은 주거 지구에서는 더 광범한 반란이 일어났다.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강제로 집에 갇혀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봉쇄 명령을 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서둘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노인 백신 접종을 늘리고 있다.

시위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각난 항의 행동보다 훨씬 심화된 것이 필요하다. 바로 체제 자체를 겨냥한 노동자들의 대중 운동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5호 / 번역 이원웅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처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 거라며 기뻐했다.

“지지율 회복세의 원인은 명확하다. 첫째는 국민이 윤 후보를 뽑아준 근본 이유인 법과 원칙의 회복, 좌파정권 청산 미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기흥 칼럼, 12월 9일자)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벌인 힘 대결에서 이긴 정부·여당과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를 본격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은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생중계 행사에서 “인기가 없어도” 연금·노동 개악들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444호,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 투쟁의 패배로 윤석열이 정치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역전시킬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최근의 쥐꼬리만한 지지율 회복이란 게 애초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실망했던 보수층이 일부 재결집한 수준임을 인정한다.

이전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었던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이 빠르게 잘 대응해 세월호 참사 직후 지지율이 떨어졌던 박근혜처럼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위로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직전 박근혜 지지율은 50퍼센트대였다. 반면 윤석열은 20퍼센트대로 더 떨어질 것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



윤석열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행사에서 “인기가 없어도” 연금·노동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 지도부들을 여론의 이름으로 압박하려는 속셈이다.

노동계 지도부들의 소심함으로 인해 실질적인(효과적인) 연대 투쟁이 조직되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화물연대 투쟁을 이력저력 종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취약한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건재하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뚜렷한 묘책도 없다. 특히, 미·중 갈등의 심화로 경제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패배가 노동계급 전반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자신이 노동 개악이 “인기가 없다”고 한 것도 노동계급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언뜻 내비친 것이다.

화물연대 기층 노동자들의 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파업 종료가 불만인 조합원들은 파업 종료 찬반 투표에 대거 불참했다(전 조합원 대비 13.67퍼센트

투표). 지도부의 투항에 동참하기 싫다는 마음을 투표 불참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온갖 책임 회피 노력을 해 왔으나, 결국 유가족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감싸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의 난처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조직 통제를 맡긴 측근을 함부로 내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을 계속 감싸는 것도 부담이다. 분노의 화살이 결국 윤석열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협의회 출범 전후로 한덕수, 권성동, 송언석 등 여권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도 사실 두려움의 반영이다. ‘세월호 트라우마’인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퍼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 이태원 참사 항의, 윤석열 퇴진 운동 등에서 운동의 성장에 브레이크 노릇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

는 불신이 늘었다. 지지율이 줄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도 별 구실을 못해 존재감이 약화됐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혼패히 지지할 정치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윤석열 정서는 모순돼 있고 따라서 상황의 유동성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즈음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봐도 모순된 대중 정서가 확인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70퍼센트였다(파업 지속 지지는 21퍼센트). 그러나 안전운임제 해법 문제에서는 화물연대 요구 지지가 48퍼센트(정부안 지지는 26퍼센트)였고, 윤석열의 파업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51퍼센트였다(정부 대응 지지는 31퍼센트).

윤석열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 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모순된 정서는 개혁주의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지, 윤석열의 우익정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제한적 지지율 회복이 그나마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김문성

민주당의 줌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 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으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한층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를 통해 참사 국정조사 지연 효과도 노리는 것이다.

사실 애초 예산안 통과 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공권력' 우선순위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직접 책임론을 경계해 왔다. 그 대신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나마 여권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미 기대감이 떨어졌다.

한편, 유가족은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이 실무 차원에서 참사 책임자일 뿐 아니라, 진상 규명이 철저히 되려면 참사 수사 경찰의 지휘자인 이상민을 직무정지시키고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만, 결국은 불만을 달래 대중 운동 측의 양보와 자제를 얻어내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관 해임건의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윤석열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

9월에도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해임되지 않았다.(이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도 별로 없다.)

이상민 해임건의안도 윤석열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참사의 정치적 책임자인 윤석열에게 이상민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어쩌면 윤석열

의 면피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파면 시도가 “대선 불복”이고 헌정 질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비난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투쟁이 범정부 차원의 탄압에 직면했을 때도 화물연대를 도울 것처럼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덜컥 수용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일단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변명했다. 그런 논리라면,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도대체 왜 통과시킨 것인가.

애초 화물연대 지도부와 협의해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제 개혁안을 국회에 발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선물을 줄 것처럼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 놓고는 옛 먹인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됐던 듯하다. 가뜰이나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투쟁이 변변치 않아 범정부적 탄압에 움츠러들던 상황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항의, 화물연대 투쟁, 윤석열 퇴진 운동 등 윤석열을 위협한 운동들마다 뒷걸음치거나 배신한 것이다.

민주당의 진정한 성격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민주당더러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다.

그런 비난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자 노동계의 개혁 입법 요구에 대한 맞불이다. 노동계는 민주당과 공조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어시스트’ 덕분에 윤석열은 11월 위기 국면에서 잠시 한숨 돌릴 틈을 얻었다.

이 틈을 이용해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를 본격화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15일 TV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인기 없는 개악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2009년 이명박의 노조법 개악 때도 반대하는 듯하다가 막판에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가 나서 개악에 협조했다.

박근혜 때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나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박영선 등이 나서 개악에 동의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민주당의 성격 때문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게 기업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자본주의 수호 정당이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집권을 경험하면서 기업인들과 고위 관료층 내에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지배 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내 진보파를 통해 포퓰리즘 전략으로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사회운동 출신 지도자 출신 인사들의 공식정치 진입 통로를 제공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대중

의 불만을 달래 대중 운동 측의 양보와 자제를 얻어내는 것이다. 지지하고 도와 주겠다는 제스처로 운동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노동계급의 생계비 문제 등에서 왼쪽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가 줄타기 끝에 기업주들의 이익이 상당히 관철되는 데 도움을 준다.

노동운동이 개혁 입법을 위해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공조할 때조차도 정치적 독립성(독자적 행동과 비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김문성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전인할 수 있을까?

김인식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전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전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국민의힘(그리고 그 전신들)에 비해 차선책이지만 말이다.

사회운동가 출신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인적·재정적 기반은 기업주들과 김진표나 한덕수 같은 국가 관료 출신자들이다.

민주당 내 정치 스펙트럼을 보면 국민의힘과 가까운 성향의 인물들이 즐비하다. 이미 10여 년 전쯤에 조국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는 지금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 자금의 상당 부분도 기업인들로부터 나온다.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이 불법이라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기업인들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케이티(KT) 전직 임원들이 주류 양당 국회의원 99명을 불법 후원했다가 현재 재판받고 있다.

박근혜 탄핵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본질적으로 같은 친기업 정책들을 실행했던 것은 민주당의 이런 기반과 관련 있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당내 진보파를 통해 사회운동의 온건한 경향을 포섭하는 전략(‘진보적’ 포퓰리즘)을 취한다. 이 때문에 사회운동 내 개혁주의자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안별로(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등에서) 민주당과의 제휴를 일절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경직된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전술적 타협을 해야만 할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배신을 비판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 비하면 두 당의 차이는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전인하려면 민주당과의 연대를 제한성과 한시성을 넘어 일관되게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대중 운동을 확대하기보다 대중 운동에 브레이크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1980년대 말 이래 거대한 대중운동이 분출할 때마다 기성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충격 흡수장치 구실을 해 왔다.

충격 흡수 장치

특히, 운동 명망가들, 총학생회 출신자들, 참여연대와 여연 등 주요 엔지오 지도자들, 주요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구실을 했다.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민중주의(포퓰리즘)를 추구해 올 수 있게 해주는 인재들이다.

이들은 ‘사회를 바꾸려면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당내 진보파들을 앞세워 아래로부터의 투쟁 잠재력을 길들이려 하고 체제를 반대하는 좌파들에게 허무감을 주는 효과를 내고자 했다. (본지 406호에 실린 최일봉의 ‘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를 보시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당 진보파들이 민주당을 개혁하기는커녕 기성 정치 체제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비판과 냉소도 만만치 않다. ‘386’ 운동권과 주요 엔지오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위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곤 한다.

민주당 전인론은 투쟁을 강조하는 경우 아마도 민주당 진보파의 이런 한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그 성격상 결코 서민층(노동계급이 다수를 차지하는)의 이해관계를 진지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없다. 민주당 전인론은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에 근거하는 것이다.

윤석열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주류 양당 모두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이 끌고 러워하는 쟁점들(이윤을 잠식하는 사회적·경제적 요구 등)을 포함하면서 윤석열에 맞서야 한다.

이런 독립적인 대중 투쟁이 최근 한국 역사에서 진보적 변화를 가능케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투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은 행동하기를 거부하거나 기껏해야 미온적이었다.



윤석열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주류 양당 모두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투쟁하는 민주대연합?

투쟁을 통한 민주당 전인론은 민주대연합(역사학의 용어로 인민전선) 전략의 한 형태다.

민주대연합은 국민의힘 등 수구적폐 세력에 대항해 일부 친자본주의 정치 세력(민주당)까지 포함한 모든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대연합을 이루자는 전략이다.

다만, 노동계 정당들과 민주당이 상층에서 선거 협약을 맺는 방식과 동시에, 기층 투쟁을 통한 민주당 압박·전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의 좌파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엽 프랑스 사회당의 좌파인 마르소 피베르는 이를 “투쟁하는 인민전선”이라고 불렀다. 피베르는 노동자들 속에서 ‘혁명적 행동위원회’ 운동을 벌였다.

그와 동시에 피베르는 인민전선 정부를 전인하겠다고 정부에도 참여했다.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는 사회당과 자유주의자들에 정치적 기반을

둔 급진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공산당은 인민전선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정부 밖에서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1936년 공장 검거 운동이 고강도되자 급진당은 겁을 먹었고, 공산당과 사회당은 급진당과의 인민전선 정부를 유지하려고 노동자 점거 물결을 억눌렀다.

공산당 대표 모리스 토레즈는 “파업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며 투쟁에 제동을 걸었다.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인류)는 “공산당은 질서를 뜻한다”라는 표제를 실었다.

피베르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 수반인 레옹 블룸의 홍보 보좌관이 됐다.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렇게 꼬집었다. “마르소 피베르는 혁명적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투쟁에 찬성하면서도 ... 쓰레기 같은 국수주의자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가르치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방안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더해 주52시간 노동제로 칭하는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번 권고문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주가 아니라, 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까지 확대해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탄력근로제에서는 3개월 이내일 경우 매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이를 미리 확정하는 게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번 권고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를 사후변경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한다.

이처럼 권고문은 노동시간에 관한 사용자들의 권한을 대폭 늘려, 시장의 변화, 물량의 변동에 따라 사용자들이 (연장근무 수당을 덜 주면서)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직무성과급제: 경쟁으로 임금 총액 삭감

권고문의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다. 이는 윤석열이 노동 공약으로도 중요하게 내세운 바 있다.

직무성과급제에 따르면, 한 기업 안에서 직무 분석과 평가(직무평가는 당연히 기업의 이윤 창출 기여도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를 거쳐 S~Z까지의 직무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들에게 마음껏 연장근로를 시킬 권한을 주려고 한다

에 따른 급여가 차등 설정된다. 이럴 경우 S등급의 직무에 포함되기 위한 노동자들의 경쟁과 분열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직무급제는 직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권고문의 내용에도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등급에 진입하려는 경쟁은 기업 수준을 넘어서 벌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도 강화될 것이다. 세대 상생이 아니라 세대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은 직무급제에 성과급제를 결합해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즉 같은 등급의 직무 안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의 경쟁도 격화된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들은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조장해 임금 총액을 낮추기 쉬워진다.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고

임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직무가 낮거나 성과가 떨어진다며 훨씬 적은 임금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 높은 '테일러주의'의 목표는 "고임금과 저인건비"라고 한다. 형용모순처럼 보이는 이 용어의 의미는 간단하다. S등급 상위 성과자에게는 임금을 높여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체계를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해 임금 총액을 낮추려는 것이다.

쟁의권 공격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도 개악돼, 점거 투쟁 금지가 명문화되고(노조법 제37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또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고 있

다.(노조법 제43조)

그런데도 권고문은 추가로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권고문은 쟁의권 공격 사례로 미국의 1947년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냉전 시기 미국 지배계급 매카시즘 광풍의 신호탄이었다. 연대파업 금지, 대체인력 저지 투쟁(피켓팅) 불법화,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현재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행위만 금지하고 처벌) 등을 담고 있다.

태프트-하틀리법은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윤석열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권고문은 그동안 윤석열이 주장해 온 것들을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될 공산이 크다.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경쟁적인 임금체계 도입으로 임금 수준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저항할 수 있는 쟁의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노동 개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

김광일



윤석열 정부는 쟁의권을 제약해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 필자는 노동자연대 회원이자 공인노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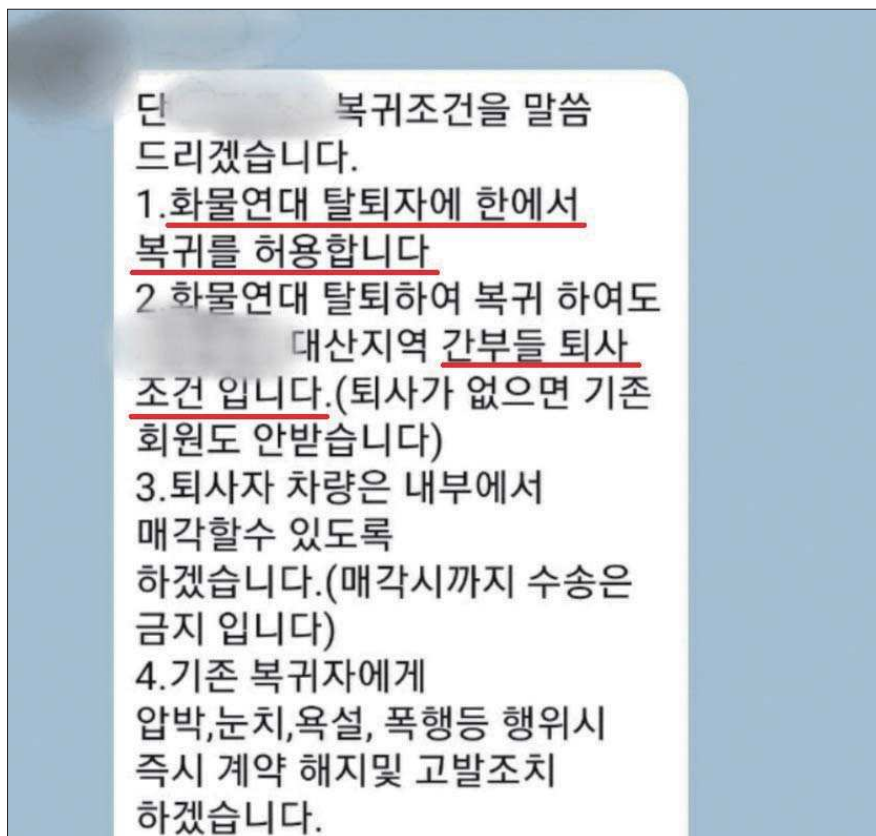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과정에서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 받았다. 심지어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사실상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추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압박도 지속하려고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로, 법률상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고 싶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정부·여당이 파업 전에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조차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노동자들이 파업한 이유가 정부의 합의(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 약속 위반 때문인데 말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의당이 동조해



파업종료 후 화물연대 탈퇴자에게 보복 공격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관련 법률 개정안(애초 정부 제시안)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바람에 한참 못 미친다. 생계 위협 속에서 힘겹게 파업을 지속하던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친 배신이었다.

그런데 이조차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적반하장

정부의 보복과 공격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2월 13일 경찰은 지난여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싸운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노동자 48명을 특수견조물침입 및 업무 방해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측이 노동자들과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겠

는데도 말이다.

또, 경찰은 12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현장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섰던 건설노조에 대한 치졸한 보복 공격이자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이처럼 탄압과 공격을 지속·확대하는 데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 노동 개악을 본격 추진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쟁의권 공격 등 노동 개악 권고문을 발표했다(본지 444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기사를 보시오).

16일간 헌신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인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 종료 후에 안타깝게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내 곧 다시 추스려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굳건하게 맞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화물 운송 노동자 공격과 연이은 개악 공세를 저지하는 데에 노동운동이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

안우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기보다 정부의 파렴치한 노동자 공격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12월 17일에는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번에 화물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이 투쟁은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국을 흔들었다.

정치적 효과

이번 투쟁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정면 대결 양상을 띠었다. 화물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이라는 소박한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지만,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도 정부와 사용자들의 총공세에 맞대응해야만 했다.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파업에서는 화물연대가 승기를 잡았다. 윤석열은 “불법”이 통한다는 선례를 또 남겼다(〈한국경제〉는 사용자들의 빈축을 샀다.

윤석열은 이번에 설욕하겠다고 강경

하게 나왔다. 파업 전부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파업 파괴 매뉴얼을 작성해 각 부처들에 배포하고,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동하고, 사법처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압박했다.

게다가 이번엔 투쟁의 판돈이 더 커졌다. 올해 내내 지속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은 더욱 광범한 대중의 불만에 직면해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은 그런 불만을 대표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성패가 노동 대중의 자신감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를 낸다면 반윤석열 운동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화물연대 파

업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 것은 이 때문이다(물론 정치 파업은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격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저항을 억누르려고 필사적이었다. 정부가 강력해서라기보다 위기감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이번 투쟁이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산업에 미친 타격 효과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12월 9일 정부 발표를 보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산업에서 경제 손실이 총 4조 1000억 원 발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두 차례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가 10조 4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화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4조 원 넘는 파업 손실은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사진은 운행을 멈춘 오일탱크로리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이윤을 파괴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도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운동 안팎에서는 오늘날 노동의 성격이 변했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이 유행했다. <경향신문>은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을 대표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은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해 보였다. 부를 창조하는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생산을 멈춰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는 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한 부문의 투쟁일지라도 성과를 내려면 투쟁의 보편화(전면적 확산)가 필요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비록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이 투쟁이 남긴 정치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한 리더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무대책을 비판하는 구호가 중요하다.”

개혁주의 지도자들

많은 언론은 화물연대 파업 패배의 원인으로 부정적 여론을 꼽는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모순적이었다. 다수가 파업 지속에 반대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안전운임제)는 지지했

다. 게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과반이 비판적이었다.

사실 여론의 향배는 투쟁이 힘을 보여줄 때 커졌다가 위기에 처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여론이 나뉘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효과적 연대 행동이 부족했던 데 있다.

노동계급 지도부들은 연대를 조직하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민주노총 중집은 뒤늦게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양경수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고백했듯이 “연말이면 쟁의권 가진 노동조합이 거의 없다.”

그래서 12월 6일의 ‘총파업’은 일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몇 시간) 파업이 거의 전부였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그 집회에 열의 있게 동원하지도 않았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월 3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긴급 노동자대회에서 “아직 총파업을 결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런 명령은 끝까지 없었다. 일부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과도 대조된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는 화물연대 투쟁에 확실한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그냥 보아넘겼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히려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상급연맹, 주요 단위노조,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이 관료 체계 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투쟁 회피 알리바이가 돼 주는 개혁주의적 ‘연대 의식’이 지배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 흔히 ‘현장에 동력이 있느냐’, ‘쟁의권이 없는데 누가 파업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즉각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권력을 총동원해 달려드는데 ‘합법’성을 따질 것이라면 도대체 언제 싸우겠다는 것일까?

유대계 팔레스타인 출신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개혁주의적인 동시에 소심하다. … 그들은 개혁을 선사하길 원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하는데도 국가와 정말로 겨루어 보려 하지 않는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 윤석열 퇴진 촛불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용기 있게 싸우며
잠재력을 보여 줬다.
안타깝게도
노동계급 지도부들의
소심한 실천 속에
효과적·실질적 연대가
건설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의 후퇴안(처음에 정부가 내놓은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을 비판하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에 협력했다. 이거라도 지키겠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배신에 공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이 품목 확대 등을 위해 투쟁해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불필요한 타협안은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이 점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몇 개월간 후퇴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정부안을 수용하기 며칠 전부터는 노골적으로 화물연대를 향해 “강대강 대치를 고집 말라”(이재명)고 압박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지난 몇 개월간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국회 논의에 기대어 왔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인 타협 압박을 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비판을 삼가고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12월 8일 민주당의 배신적 후퇴안이 발표되자 무너져 버렸다.

이번에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끈기 있게 싸우며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대안임을 보여 줬다. 안타깝게도 좌파 연하는 노동조합 지도층의 소심한 실천 속에 효과적·실질적 연대가 건설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윤석열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태 전개는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통제를 지속하다가 실책하여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고, 자만하여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공격하려 하다가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비록 이번에 씹쓸하게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박설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강동훈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증권은 이미 10월 28일 만기 직전에 겨우 차환(증권을 새로 발행해 이미 발행돼 있는 증권을 상환하는 것)된 바 있다. 이 증권은 내년 1월 중순에 또다시 만기가 돌아온다. 만약 차환에 실패하면 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HDC 같은 건설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상황이 더 심각해서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보면, 고금리, 집값 하락, PF 대출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할 수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4대 은행보다 부동산 PF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JB금융(전북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PF 대출이 전체 대출 중 11.6퍼센트나 되고, DGB금융(대구은행)은 7.2퍼센트, BNK금융(부산은행, 경남은행)은 6.9퍼센트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평균 2퍼센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지방은행들은 지방 건설 사업에 대출한 경우가 많아 미분양 증가로 인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다시 금리 인상

이처럼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진 출처: 둔촌주공 시공사(여의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최근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집값이 더욱 하락해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계속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12월 14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4.5퍼센트로 또다시 0.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또 미국 연준 위원들은 내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5.00~5.25퍼센트로 제시했는데, 이는 9월 전망치(4.6퍼센트)보다 0.5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에도 0.75퍼센트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당초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현재 3.2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한 차례 더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기준금리는 이미 미국보다 이미 1.25퍼센트포인트나 낮다. 미국 연준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5퍼센트로 올리는 등 인상을 지속할 경우,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져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공산이 커진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공산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우스푸어·깡통전세 증가에도 부자 지원만 내놓는 윤석열 정부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노동자 등 많은 서민들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집값이 대폭 오를 때 무주택자였던 103만 6000명이 주택을 사들였다고 한다. 올해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정점일 때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떨어지는 집값에 전전공공하며 치솟는 금리 때문에 월급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데 써야 하는 '하우스푸어'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전세자금대출 금리 급등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은 최근 '깡통전세' 공포까지 겪으며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오피스텔을 1100채 넘게 사들인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다가 사망해, 전세 임차인 수백 명이 보증금을 폐일 위기에 처한 사건이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수백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다주택자 종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말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면 그들이 임대료를 낮춰 줄 것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집을 사들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주택 수요를 조금이라도 늘려 금융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내맡길수록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고통은 커져 왔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대출을 받아 살 집을 구하느라 허리가 휘었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전전공공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수 대비 5.5퍼센트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거 삭감해 버렸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려 하면서 서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다.

치솟는 금리와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발생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대출 금리 인하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대중 저항이 벌어져야 한다.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정선영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5841원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5만 2730원이었으니 7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해 10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보다 18.6퍼센트 올랐다. 정부안대로 내년에도 추가로 인상되면 2021년보다 무려 5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심지어 한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 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제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 온 사람들은 한국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싸다고 말해 왔지만 더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생계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것이니 말이다.

적자의 원인

정부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올해 한전의 적자는 3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것이라고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물가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이나 전쟁의 여파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전쟁이 심화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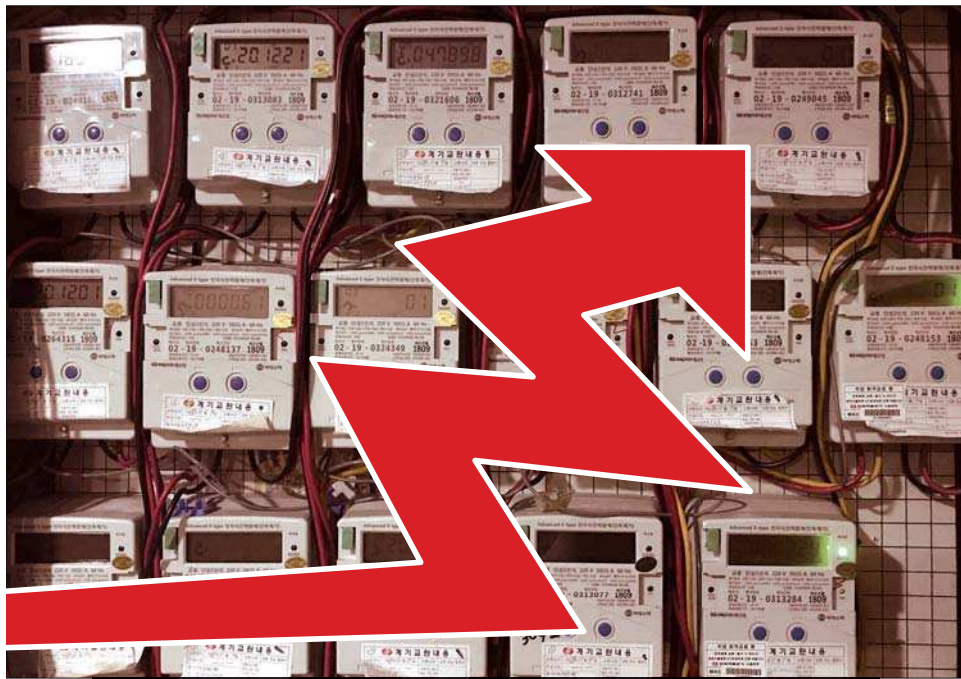
게다가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 온 전력 산업 민영화는 한전의 적자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한전의 발전 부문을 자회사 6곳으로 쪼갠 뒤로 발전 부문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진척됐다. 지금은 발전 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을 민간 발전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 발전 기업들은 올해 큰 이익을 거뒀다. SK·GS·포스코·삼천리 등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회사 6곳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 523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얻은 8101억 원의 두 배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에 비례해 올라간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싸게 구입해 둔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한전은 기업들에 막대한 할인 혜택을 줬다. 2015~2019년 5년간 전력 소비 상위 50대 기업에 준 요금 감면 혜택은 10조 원이 넘는다.

따라서 한전 적자의 책임은 이제까지 혜택을 본 기업들이 져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 주는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 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폭리를 취한 기업들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 노동자·서민을 지원해야 한다.



폭등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해 20퍼센트가량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기후 위기 대처하려면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환경 NGO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주려는 것에 반대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채권 발행이 늘면 채권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기 요금을 올려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적자를 해결하려면 “화석연료 과다 의존을 끊어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도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전기요금을 50퍼센트 이상 인상하고, 동시에 서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기후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기후 위기 대응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만 키울 뿐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한국인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필수적인 전기 소

비량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김병권 씨도 인정하듯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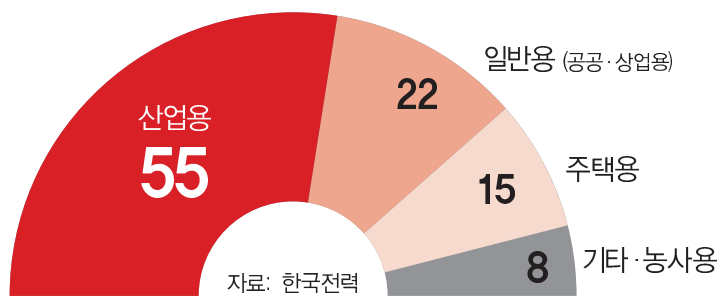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도 대부분 기업들이 한다. 따라서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기업들의 이익 논리에 맞서 노동자 등 억압받는 사람들의 저항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정의당과 기후 관련 단체들도 기업에 맞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자 등 서민층도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진정한 책임을 흐리게 된다.

이는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해악적이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보면 기후 운동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이해관계와 대립된다는 생각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후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물가 인상에 고통받는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저항이 성장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런 투쟁이 성장할 때 기후 위기에 맞설 진정한 동력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별 전기 사용 비중 단위(퍼센트)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존 몰리뉴가 12월 1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갑작스럽게 타계했다는 소식에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향년 74세였다.

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체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학생과 청년 노동자 세대에 속한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1968년 존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 가입했다. 당시 사우샘프턴대학교 학생이던 존은 '베트남연대운동(VSC)'에 참여하고 프랑스의 1968년 5월 반란 당시 파리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급진화했다. 존을 IS에 가입시킨 사람은 IS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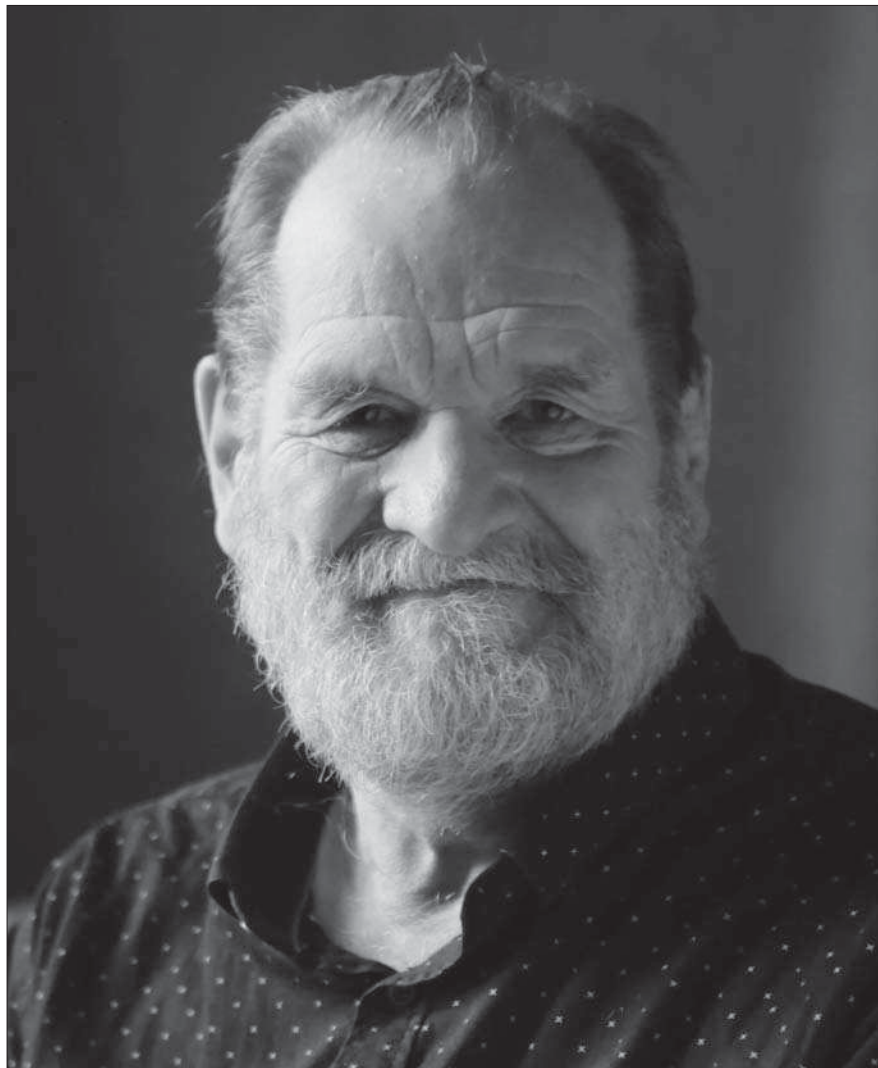
존은 이후 평생 동안 헌신적인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지냈다. 처음에는 SWP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SWP의 아일랜드 자매 단체 — 지금의 사회주의 노동자네트워크(SWN) — 에서 활동했다. 존은 포츠머스폴리테크닉(훗날의 포츠머스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존의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로 이끌렸다. 존은 굳건한 활동가였고, 아일랜드로 이주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SWP 포츠머스 지회의 기둥이었다.

명료함

그러나 존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저술 활동이었다. 존은 편집 과정에서 클리프의 도움을 누리며 1978년에 첫 저작 《마르크스주의와 정당》[국역 책갈피]을 출판했다. 당시는 국제적으로 혁명가들이 혼란과 논쟁에 휩싸인 시기였는데, 존은 이 책으로 사회주의 조직이라는 핵심 문제를 굉장히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줬다.

존은 〈소셜리스트 워커〉에 여러 해 동안 정기적으로 기고한 주간 칼럼에서도 그러한 명료함과 해박함을 보여 줬다. 마감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손글씨로 토박토박 써서 보낸 존의 칼럼은 당시의 쟁점과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 보여 줬다. 그 글들 중 몇몇은 소책자로 엮어서 출판되거나 단행본에 수록됐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국역: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책갈피]는 존의 저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은 1983년에 발표된 후에도 소책자나 온라인 글의 형태로 널리 재발행되고 번역됐다. 거기에서 존은 마르크스·엥겔스·레닌·트로츠키·룩셈부르크·그람시의 고전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와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이라는 사회주의 개념을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왜곡과 오염에서 건져 내고자 했다.

그러나 존은 정설을 명료하게 해설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존은 1983년에 쓴 《레온 트로츠키의 혁명적 이론》에서 트로츠키를 자신의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하면서도 그의 이론적·정치적 약점이라고 여긴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활동가로서도 존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았다. 존은 SWP 지도부가 영국과 국제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 당을 건설하기 위해 채택한 노선들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존은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면 이를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도전하기도 했다. 특히, 당내 논쟁 문제에서 그랬다.

그러나 SWP가 출범에 일조했

던 급진 좌파 결집체 리스펙트가 2007~2008년에 위기에 빠지자, 존은 앞장서서 SWP를 방어했다. 존은 이 문제가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

창의성

세월이 흐를수록 존의 마르크스주의는 폭이 넓어지고 창의성이 더해졌다. 존은 예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사랑에서 자양분을 얻었던 것이다. 2020년에 쓴 《예술의 변증법》에서 존은 예술이란 “형식과 내용의 융합이나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소외되지 않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존은 역사적 맥락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세심한 안목으로 램브란트 등의 개별 예술가들을 탁월하게 다뤘다.

이 분야에서도 존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이론과 실천은 결합돼 있었다. 1992년부터 포츠머스대학교 예술·디자인 학부 교수를 지낸 존은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에 영감을 줬다. 2007~2010년에 존은 연례 ‘맑시즘 페스티벌’[SWP가 주최하는 연례 포럼]에서 ‘레프트 인 비전’이라는 미술 전

시회를 조직했다.

2010년 교수직에서 은퇴한 존은 파트너 메리 스미스와 함께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이주했다. 존은 더블린에서 정치 활동에 투신해, SWN 지도부의 일원이 됐다. 존이 함께한 SWN 지도부는 대성공을 거둔 연대체 ‘이윤보다 인간을’의 전인차 구실을 했다.

기후 변화

존은 늘 분주했다. 존은 SWN의 이론지 《아이리시 마르크시스트 리뷰》의 편집자이자 국제사회주의경향 조정 회의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존이 가장 많은 노력을 쏟은 일은 가속되는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을 버리는 것이었다.

존과 나 모두 동의했던 것은, 기후 변화가 인류의 최대 위협인 동시에 혁명의 가장 중요한 촉매라는 것이었다. 존의 이러한 관심은 2022년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책 《사회주의와 혁명에 관한 선집》에 반영돼 있다. 존은 세계생태사회주의네트워크(GEN)를 설립해, 기후 변화라는 실재적 위기에 대한 반자본주의자들의 대응을 서로 연결짓고 강화하려 했다.

내가 존과 함께 보낸 시간 중 가장 한가로웠던 때는 2009년에 브라질 네테로이 시(市)에서 열린 한 회의에 함께 참가했을 때였다. 존은 당시 회의 장소에서 좁은 바다를 건너가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묵고 있었다. 리우데자네이루로 빙 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존은 먼 거리를 오가야 했다. 그럼에도 존은 늘 활력이 넘쳤고, 질문과 주장이 끊이지 않았으며, 호기심과 동지애가 가득했다. 존은 한 브라질 학생을 친구로 사귀어서, 그 학생 가족이 사는 파벨라[브라질 빈민가]에 초대받기도 했다.

마르크스가 좌우명으로 차용한 경구, “인간에 관한 일은 어떤 것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은 정말이지 존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마르치지 않던 활동의 샘플이 이제 더는 솟지 않게 됐다.

존의 파트너 메리와 존의 가족들, 특히 존의 자녀 사라와 잭, 존의 손주들과 증손주들, 그리고 아일랜드와 영국과 세계 곳곳에 있는 존의 동지와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5호 / 번역 김준호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박이랑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었다. 경찰 조직의 일부인 “지도순찰대”는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이란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화장을 하거나, 너무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미혼 남녀가 함께 걷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체포된 사람들은 지도대원에게 뺨을 맞거나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고, 길게는 수개월까지 구금되기도 한다.

남성도 ‘서구식’ 머리를 한다거나 짧은 바지 등을 입는다면 처벌받는다.

이슬람주의

이란에서는 언제부터 이처럼 이슬람 전통의 엄격한 적용이 대중에 강요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이슬람주의 성직자들이 주도한 반혁명과 밀접하게 관련있다.

1978~1979년 이란에서는 부패하고 억압적이던 친미 왕정에 맞선 혁명이 일어났다. 학생, 여성, 빈민, 전통 시장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했고, 결정적으로 석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확산되자 왕정은 무너졌다.

그러나 혁명의 주도력을 두고 벌어진 정치 투쟁에서 중간계급을 대변하는 이슬람 성직자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이슬람주의는 친미 왕정하에서 추진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주변화됐다고 느낀 일부 성직자들과 중간계급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이들은 근대화·산업화가 낳은 모순의 해결책을 자신들이 생각한 ‘이슬람 원리’에서 찾으려 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좌파뿐 아니라) 권력자들을 비난하고 사회 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약속하며 대중의 지지를 모았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했다. 그들은



이란에서 히잡 의무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의 일환이다

이미 발전한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관계를 무시한 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살던 7세기의 이슬람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 없었다.

히잡 착용의 의미

히잡 착용의 의미도 같을 수 없었다. 이슬람 경전인 쿠란은 남성과 여성이 옷차림을 “정숙”하게 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여성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와 가슴을 가리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예언자 무함마드가 살던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머리 가리개는 흔한 복장이었다. 상인 출신인 무함마드는 주요 무역로였던 아라비아 반도

와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발흥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교 관행과 경전 텍스트에서 머리 가리개 등 많은 것을 차용했다.

그러나 이후 이슬람 제국에서 히잡 착용이 갖는 의미는 초기와 달랐다.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히잡 착용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 짓는 표지이자 ‘문명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히잡은 주로 지배계급과 도시 상류층 여성들이 착용했고, 점차 피지배 계급으로도 착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결코 제국의 다수를 이뤘던 농민, 유목민,

도시 하층민 여성 등이 모두 히잡을 착용했던 것은 아니다.

지배 이데올로기

1979년, 왕정이 전복된 이후 이슬람 주의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슬람은 국가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는 구실을 했다.

친미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의 여파 속에서 수립된 이란 이슬람 국가는 건국 직후부터 서방 제국주의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혁명이 다른 제3세계 친미 정권들을 위협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란-이라크의 8년 전쟁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후원했다.

이란 정부는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이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이라며 정당화했다.

비록 서방의 압박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이란 지배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역내 다른 강국들과 경쟁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국가를 강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평등과 위기, 정치적 억압 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고 입막음하는 데 “지도순찰대”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해석해 강요하는 것이 유용했다.

이처럼, 이란에서 히잡 착용을 포함한 이슬람 율법은 이란 지배자들의 억압적 통치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핵심적 구실을 해 왔다. 따라서 이란에서 히잡 의무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프랑스 정부의 히잡 착용 금지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의 지배자들은 한편으로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침략과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이슬람을 악마화하고 열등한 종교로 묘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옛 식민지 출신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이슬람이라는 똑같은 종교가 서구에서는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 자리잡게 됐다.

즉, 이란에서 이슬람은 지배 이데올로기이고 억압적 도구로 쓰이지만,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서민층의 종교인 것이다.

프랑스를 보자.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심화로 강화되기 시작한 이주민(주로 구 식민지인 북아프리카 출신) 차별은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더 악화됐다.

그 일환으로 2011년 프랑스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이 금지됐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들은 모두 히잡 착용을 강요받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정치적인 반항의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히잡을 착용한다.

이들을 모두 “가부장적 남성들”의 강요에 의해 히잡을 강제로 쓰는 피해자로 보게 되면, 서구 지배자들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견에 제대로 맞설 수 없게 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f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투쟁 취재 영상
- 앞시즘 강연 음원

총 470여 개 콘텐츠



채널 바로가기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5 1

더 잔인하고 더 위험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겨울이 되면 교전이 다소 잦아들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 헤르손 철군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공격 방식이다. 이 야만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12월 14일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포격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몇 주 만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얼마 전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12월 5일 모스크바 남동부에서 불과 185킬로미터 떨어진 라잔시 인근의 비행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연료 트럭이 폭발해 3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옌젤스 공군 기지, 다음 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90킬로미터 떨어진 쿠르스크의 비행장도 공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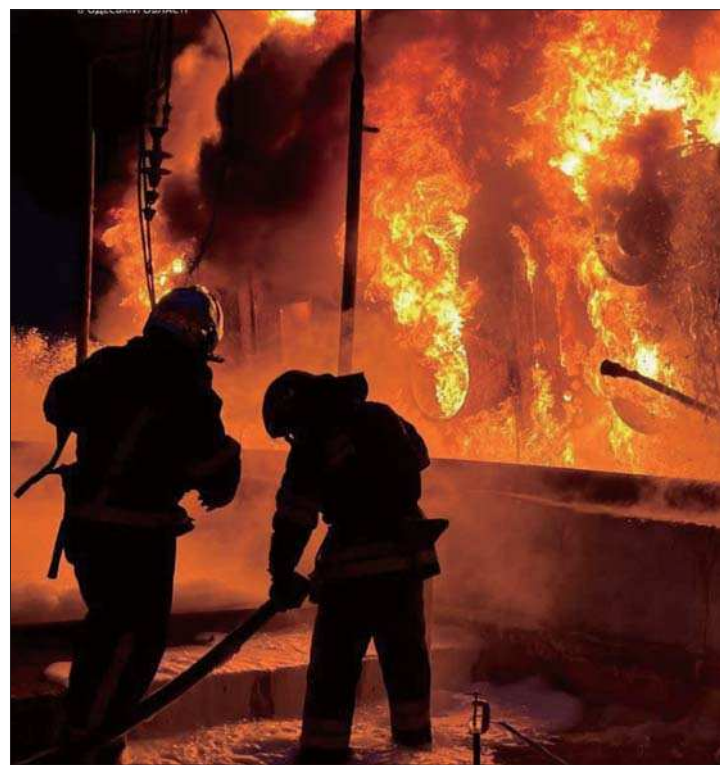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그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출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러시아 영토의 가장 깊숙한 곳을 타격한 것이다. 공격을 받은 옌젤스 기지는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Tu-95 전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폭격기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

전략폭격기라는 것은 핵 전력의 일부라는 뜻이다. 그런 만큼 이 공격은 러시아를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패트리엇 미사일

실제로 푸틴은 다시 핵전쟁 위협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12월 9일 푸틴은 '예방적' 핵 타격을 시사했다. "잠재적인 적수



12월 5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오데사에서 일어난 화재

12월 5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오데사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가 선제 타격을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서 제기되는 위협에 관해 곱씹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잠재적인 적수"는 미국을 뜻한다.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를 핵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쓰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집고, 비핵 위협에 대응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10월 말에 발표할 바 있다. 핵전쟁의 위협이 푸틴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려 한다. 국방부 장관과 바이든의 승인만 남은 상태이고, 승인될 공산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고, 사거리가 길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그전까지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는 젤렌스키의 요청을 거둬 물리쳐 왔다. 미국 자신도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이 야기할 확산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상황 논리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공습 강화에 직면해 그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려 한다.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더 안전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상당한 확산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전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방어가 취약한 곳에 대한 공격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러시아는 미사일 방패를 무력화하려고 더 파괴적인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도 조속한 평화 협상을 전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그 대가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노년층이 평소보다 더 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방(과 한국 등 친서방) 진영과 러시아 모두에서 자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전쟁 노력과 그에 대한 지원에 맞서는 투쟁이 절실하다.

이원웅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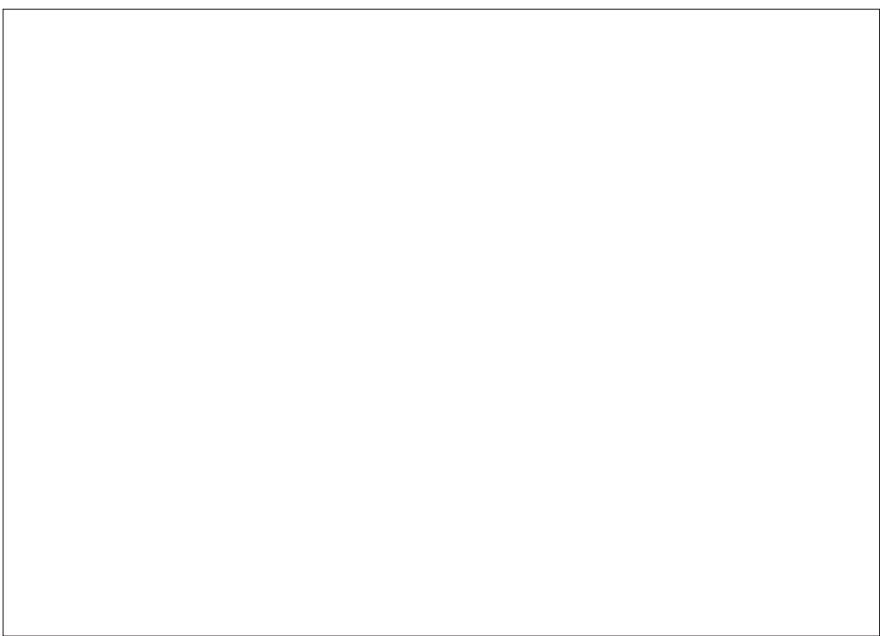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12월 7일에는 우익 유튜브 버를 끌어모아 ‘120대 유튜브 연합 창단대회’도 열었다.

전광훈은 극단적 발언과 기괴한 언행 때문에 보수 개신교 내에서도 반발을 많이 사 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를 적극 지지해 왔다.

2018년 이후 우익 집회의 주 동력은 개신교 우파에서 나왔다. 그 핵심에 있는 전광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끌었다.

개신교 우파가 신도를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2000년대부터였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우파 세력은 노무현 정부 출범 1주일이 채 안 된 3월 1일 대규모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미약한 개혁 시도(국가보안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



올해 11월 광화문 인근에서 자유통일당이 집회를 하는 모습

정 등)를 좌절시키는 일등공신이 됐다. 개신교 우파는 미국의 기독교 우파를 모방해 거리 동원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우파 정치인들과의 연계를 늘려왔다.

대선에도 적극 뛰어들어, 이명박, 박근혜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는 공식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에는 맞불 집회를 열며 계엄령 선포를 요구했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된 주류 우파 정당은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는 척했다.

관계 유지

하지만 실제로는 우파 정치인들이 가두 우익의 활동과 관계를 유지했

다. 전광훈이 거리 집회를 조직하며 분열되고 위축됐던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키자 주류 우파 정치인들은 전광훈 세력을 지원했다.

2019년 9월 전광훈이 주도해 결성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서 본부장은 이재오(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당시 결성식에 참석했다. 현 서울시장 오세훈, 현 대구시장 홍준표, 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국민의힘 전현 원내대표 권성동·김기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장제원도 당시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그해 10월 3일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요구한 광화문 집회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

원, 전 대표 홍준표,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참가해 연설했다.

최근 전광훈 세력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하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추천인 전광훈’을 쓴 입당 원서가 쏟아지고 있다(《중앙일보》). 윤석열이 지지할 후보가 누구일지를 봐야겠지만, 전광훈은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태극기 부대’(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친박’ 단체 등을 뜻함)가 조직적으로 입당해 황교안을 지지했었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 우파 결집을 위해 호전적 주장과 황당한 색깔론 비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에서 활동한 김문수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것이 아스팔트 우파를 고무하는 듯하다. 김문수가 국회에서 문재인을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것을 윤석열이 두둔한 것도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앞으로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주류 우파와 아스팔트 우파의 상호작용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대중 투쟁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

정진희

▶ 16면에서 이어짐

참사 문제 해결하려면 윤석열이 내려오게 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윤석열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이미 밝혔)은 이태원 참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혀 부차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참사의 진정한, 정치적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350여 명을 압사로 죽거나 다치게 만든 참사의 배경, 발생, 은폐 시도 모두에서 진정한 책임자이다.

이태원 참사의 한 요인인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워 온 것이다. 참사가 없었다면 헬러윈 기간에 윤석열의 ‘작품’이 만들

어질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헬러윈 기간을 앞두고 국정원,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범정부 기관을 망라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3일 전 당정 협의로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꾸렸다.

경찰은 그런 윤석열의 충실한 손발로 움직였다.

경찰은 일선까지 강하게 통제되는 엄격한 관료 조직이다. 경찰의 조직적인 행위는 윤석열의 지시(큰 틀의 방향이든, 구체적인 지시이든) 아래서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태원 인파 대책포기와 방치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요컨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방향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정도가 아니라, 살릴 수 있었던 160명 가까이를 하루아침에 사망케 한 데 대한 실질적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참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대중 통제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해서 위기에 대

처하려고 한다. 15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다시금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마약 범죄를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 재시동을 걸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전격적인 노동개악안 연구 보고서 발표, 부자 감세와 복지 삭감 등이 보여 주듯 윤석열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망가뜨리려 한다.

이태원 참사로 끔찍한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자. 윤석열 퇴진 운동을 더욱 키우자. 퇴진 운동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김승주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된 추모 공간 및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이상민을 파면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유가족들의 이러한 절박한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등이 앞장서 벌써부터 유가족협의회 비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해임건의안으로 수위를 낮추는 등 벌써부터 지극히 소심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 민주당이 하는 짓은 표적을 흐리는 짓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 때도 유가족들의 편을 자임했지만, 결정적인 때마다 기소권 포기 등 유가족에게 요구 수위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여야 야합으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235호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윤석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편,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거리 운동이 확대돼야 한다.



12월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진 유가족들.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윤석열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윤석열이 권좌를 지키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의는 없다

12월 13일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참사 현장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친구 두 명을 잃었던 한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다.

안타까운 이번 죽음의 책임은 실제로 윤석열에게 있다(관련 기사: 본지 440호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모욕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영영 '과거'가 돼 버리는 것이다.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과 정부·여당은 바로 그것을 원한다.

한편으로 특수본 수사는 용산경찰서장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희생자 사망 원인이 압사가 아닌 마약일 수 있다는 등, 희생자 유가족의 항의가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있다.

이는 모두 책임 은폐와 전가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강제력도 없는

국정조사마저 파행시키고 이태원 참사 항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정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저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려고 벌이는 '쇼'에 사람들이 놀아난다는 얘기가.

그러나 지난 한 달 남짓 사이 이태원 참사 항의와 윤석열 퇴진 운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윤석열을 난처하게 했던 상황에 견줘, 민주당은 지독하게 소심했고 결정적 순간에 배신적이었다.(관련 기사 5, 6면 '민주당의 줌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 15면으로 이어짐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12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차승일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번역,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

67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가 총리가 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극우 세력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이어지는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1920~30년대 이탈리아와 독일 등지에서 발흥하는 파시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세계가 점점 위험해지는 지금 '거인'의 통찰을 배워 보려 합니다.

참가신청
bit.ly/1228-meeting

